

5·18민주화운동이 어느덧 39주기를 맞았다. 신군부의 총칼 앞에 맥없이 무너지는 민주주의를 목도한 오월영령들은 39년 전 기꺼이 산화했고, 살아남은 이들은 39년째 착잡한 5월을 맞고 있다.

발포 명령자 등 진실 규명은 아직도 제자리 걸음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약속했던 5·18정신의 헌정사적 의미와 헌법적 가치 규범화도 요원해 보인다.

그러는 사이 5·18 왜곡·폄훼는 도를 넘어서고 있다. 5·18의 가치를 인정하는 않는 것은 물론 유족과 광주시민들의 아물지 않은 상처를 후벼파고 있다. 5·18을 정쟁의 도구로 삼으려는 음험한 사슬고리를 이제는 끊어야 한다. 역사는 올곧은 진실규명 앞에 바로세울 수 있고 진일보 할 수 있다.

5·18 진상규명 대상, 역사 왜곡의 흔적들, 평범한 시민들의 위대함, 깨어있는 시민들의 시대적 소명을 세 차례에 걸쳐 게재한다. [편집자 주]

“오월 대동정신으로 민주주의 국민적 합의 공고화해야”

[5·18 39주년]<하>

“5·18 시민 저항권 행사·자치공동체 실현에 큰 의의” 대동정신 통해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 공고화

5·18민주화운동 39주년을 맞아 국가폭력에 맞선 ‘평범한 시민들의 의로움’이 주목받고 있다.

1980년 5월 광주시민들은 나눔·연대·정의로 대동세상을 만들었다. 항쟁 기간 질서를 유지해 ‘절대공동체’를 이뤘다. 평범한 시민들이 평화로운 방법으로 민주주의를 지켰다.

불의한 권력에 맞선 광주시민의 피땀은 한국사회의 민주화를 지탱하는 동력이 됐다. 5·18 이후 광주의 진실을 알리기 위한 많은 부정은 한국의 민주화운동이었다.

하지만 요원한 진실 규명과 잇단 5·18 왜곡·폄훼로 그 날의 아픔은 현재진행형이다.

광주에 진 빛을 갈기 위해선 핵심 의혹들을 밝히고, 대동정신을 바탕으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공고화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9일 5·18기념재단에 따르면, 군사 정변으로 정권을 장악한 신군부는 1980년 5월 17일 비상계엄령을 전국으로 확대했다.

국회 해산, 정치 활동 금지, 집회·시위 금지, 언론 통제, 입법·사법·행정권 장악 등 신군부의 독재에 격분한 광주 대학생들은 거세게 반발했다.

도심에서 신랄적인 시위가 계속되자 계엄군은 시민들을 무력 진압했다. 처음엔 관망하던 시민들도 군의 진압함에 분노, 5월 19일부터 항쟁에 동참했다.

학생들이 교정 밖으로 나와 투쟁했다. 택시·버스기사들은 금남로로 나와 대규모 차량 시위를 벌였다.

시위에 나선 광주시민들은 평범한 사람 이었다. 중고등·대학생, 가게 점원, 회사원, 자영업자, 주부 등 남녀노소를 가리지 않고 전 계층의 민중이 계엄군의 폭격에 맞섰다.

5월20일 밤 광주역 앞 첫 발포를 시작으로 다음 날 오후 1시 전남도청 앞에서 계엄군의 집단발포가 있다. 시민들은 생명을 짓밟는 군의 만행에 분노해 시민군을 조직했다.

5월21일 오후 외곽으로 몰려난 계엄군은 광주를 봉쇄했다. 5월22일부터 26일까지 5일간 광주는 유례없는 행정기구의 부재를 맞았지만 시민들은 각자 역할을 나눠 맡아 질서를 회복했다.

대학생·예비군 장병으로 꾸려진 기동순찰대가 안정적인 치안을 유지했고 상인들은 영업을 재개하는 등 일상을 되찾았다. 전기·수도가 정상적으로 공급됐고 시중은



행에 예치된 금융 자산도 보전됐다.

학생·주부·봉사단원들이 시민군을 위해 매 끼니 밥을 지었다. 양동·서방시장 상인들은 김밥·빵 등을 시민군에게 전했다. 함께 주먹밥을 나누고 시신을 수습했다. 병원에는 현혈·봉사활동을 하려는 시민 별길이 이어졌다.

열흘 간의 시민항쟁은 5월27일 새벽 계엄군의 도청 진입작전을 끝으로 막을 내렸다. 병원에는 현혈·봉사활동을 하려는 시민 별길이 이어졌다.

이후 국민들은 5월 광주의 진상 규명을 촉구하며 민주화 운동에 나섰다. 1987년 6월 항쟁을 통해 직선제를 쟁취했다.

민주주의의 단초를 마련한 5·18이지만 그날의 진상은 밝혀지지 않았다.

발포명령 등 술한 의혹은 풀리지 않은 채 남아있고 5·18을 둘러싼 근거없는 왜곡·폄훼가 갈수록 기승을 부리고 있다.

이에 5·18의 정신과 의의를 되새겨 국민통합 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최용주 5·18재단 연구위원은 “5월 광주의 정신은 국가 폭력에 맞서 시민 저항권을 행사했다는 점, 직접민주주의 모델로서 ‘대동 사회’를 실현했다는 데 있다”면서 “프랑스 대혁명 이후 정당화된 시민 저항

권을 행사하고 항쟁 기간 내내 질서정연한 자치공동체를 이룬 것은 시민의 힘을 상징적으로 보여줬다는 의의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5·18은 민주주의 발전의 가장 큰 분수령이었다”면서 “국가는 광주시민의 신체적 존엄을 말살한 반인륜적 범죄를 부인하거나 증명된 사실을 왜곡하는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에 반하는 것이고 기본권 자체에 대한 도전이다”고 설명했다.

이율라 “5·18 왜곡에 단호히 대처하고 오월 대동 정신을 토대로 ‘민주주의’에 대한 국민적 합의를 공고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5·18 핵심의혹 담겼나…“정부 차원 美기밀문서 확보 시급”

5·18민주화운동 당시 미국 정부에 광주의 상황을 보고한 미군 정보요원이 39년 만에 신군부의 만행을 증언하면서 미국 기밀 문서 확보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다.

미국 기밀문서에는 발포·학살 경위, 학기사격, 편의대(공작 펼친 사복군인) 활동, 암매장 관련 내용 등이 담겨 있을 것으로 보인다. 정부가 진상 규명을 위해 자료를 조속히 확보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5·18 당시 미군 501정보여단 정보요원이

었던 김용장씨는 14일 광주 서구 5·18기념 재단에서 증언대회를 갖고 ‘항쟁 열흘동안 전두환씨 광주 방문 도청 앞 헬기 사격, 편의대의 폭동 공작, 사체 화장처리, 교도소 습격의혹, 공수부대에 의한 성폭력 등을 모두 보고했다’고 밝혔다.

25년간 미군 정보요원으로 재직한 김씨는 5·18 관련 첨보 보고서 40건을 보고했다. 이중 5건이 백악관으로 보내졌으며 지미 카터 당시 미국 대통령이 3건을 직접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이날 “미 정부 보고서 원본을 우리 정부가 공식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면서 “국회도서관에 소장된 700여 건을 비롯해 이미 확보된 미 기밀문서는 민감한 부분이 먹칠로 가려져 있다. 반드시 원본 자료를 요청해 확보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기회가 닿는다면 직접 현 정부에 견의할 생각이다. 광주 항쟁의 진상이 현 정부 임기 내에 밝혀지길 바란다”고 전했다.

조진태 5·18기념재단 상임이사는 “그동안 미 기밀문서에 접근을 시도했으나 민간단체·기구로서 한계가 명확했다. 정부 또는 앞으로 출범할 5·18진상조사위원회에서 반드시 미국의 자료를 확보해 검증할 필요가 있다.

최용주 5·18기념재단 연구위원은 “당시 상황을 시시각각 들여다봤을 미국 기밀문서가 진상 규명에 있어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도 정부가 공식적으로 요청한 바가 없다”고 밝혔다.

최 연구위원은 “연구자들이 개별 요청하면 문서 중 3분의 1 정도가 삭제돼 있다. 삭제된 민감한 부분이 진상 규명의 관건이 될

수 있다고 본다”면서 거듭 정부 차원의 문서 이관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또 “아르헨티나는 군부 독재 당시 미국이 수집한 기밀문서를 정식 요청해 최근 4만 7000여 쪽 짜리 자료를 통째로 넘겨받았다”

면서 “독재를 경험했던 칠레·브라질 등도 정부 차원에서 미국에 기밀문서 해제·이관을 요청해 진상 조사와 책임자 처벌에 활용했다”고 역설했다.

한편 미국의 정보공개법은 3급 비밀 5년, 2급 비밀 15년, 1급 비밀은 30년이 지나면 이를 열람하고자 하는 신청자에게 공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완도군 eShop

완도군 공식 농·수산물 쇼핑몰

완도군 특산품관

WANDO COUNTY

전국제일의 청정바다에서 생산된
전복, 김, 미역, 멸치, 다시마 등
자연 그대로의 맛과 신선함!